예술가를 범죄자로, 기록을 범죄로 -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한다

2025년 7월 7일, 대한민국 검찰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부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해왔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JTBC, YTN 등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오전 5시경 내부에서 들린 굉음에 취재진과 함께 진입했고, 그 현장을 기록하다 연행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은 보도상을 받았다. 그러나 예술가 정윤석은 범죄자가 되었다. 이 극명한 이중잣대가 2025년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민낯이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이 예술가임을 명확히 밝혔고, 예술가로서 이력과 공익적 기록 목적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를 80시간 동안 불법 구금했고,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특수건조물침입'이라는 중죄를 적용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카메라를 든 예술가가 어떻게 이런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정윤석 감독은 20년 동안 광우병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국가가 외면한 진실을 기록해온 다큐멘터리스트다. 그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던 예술가이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에게 탄압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단독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국가적 위기를 기록해 온 예술가가 폭도일 수가 없다”며 감독의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박찬욱, 김성수, 변영주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15,000여 명의 시민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21조넷, 한국독립영화협회, 김근태재단 등 220개 시민단체가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는 예술가의 양심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고, 심지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 검찰은 이런 적대적 환경을 방치하며 예술가를 폭도들과 한 묶음으로 엮어 처벌하려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추구하는 정의로움인가?

실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예술가의 항고 신청마저 기각했다. 만약 검찰과 한편이 되어 예술가를 탄압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의 기록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활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예술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만약 정윤석 감독이 유죄라면,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 누가 카메라를 들 수 있는가? 언론이 아니면 진실을 기록할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 국가 기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어겨도 괜찮은 것인가?

기록하는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재판부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라. 탄원서에 서명했던 15,000명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20개 시민단체의 경고를 직시하라.

재판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2025년 7월 9일
(사)한국독립영화협회,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